



## 대만 문제에 있어 미-일-한 삼각 공조를 구축하려면

BY 다니엘 푸

다니엘 푸([dfu@hbs.edu](mailto:dfu@hbs.edu))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원이다.

PacNet시리즈는 미일한 3국 차세대 지도자 대회의 일환으로 이 중요한 파트너십을 어떻게 육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창의적 사고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일본과 미국은 대만 해협에 대한 억제력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예를 들어, 2021년 일본과 미국 정부는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 비상사태에 대비해 미 해병대가 난세이 제도를 따라 공격 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수반하는 공동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2023년 미-일 안보협의위원회(2+2) 논의가 끝난 후 미국 정부는 오키나와에 있는 해병대 연대를 개편해 여기에 대만 해협에서 군사 충돌 발생시 중국 인민해방군(PLA) 해군 함선을 타격할 수 있는 대함미사일을 장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은 오랫동안 같은 노선을 따르기를 꺼려왔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과 최근 한국 대중의 중국에 대한 적대감이 상황을 바꿀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대만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움직임은 주목할 만하다. 예를 들어 2021년 5월 한·미 공동성명에는 대만이 처음으로 언급됐다. 2023년 2월 한국 박진 외교부 장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무력을 통한 대만해협 현 상태의 일방적 변화에 반대하며 그러한 변화가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의 이전의 입장과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이다. 그러한 의지가 아무리 작더라도, 궁극적으로 대만의 방위를 지원하는 한국 정부가 수

할 수 있는 점진적인 조치로 전환해나가지 않는 것은 태만일 것이다. 이 기사에서는 조치되어야 할 세 가지 단계를 파악하고 논의할 것이다.

첫째, 대만해협 군사사태 시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병력의 미국 작전 지원을 허용할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3국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가 조직되어야 한다. 미국이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자국의 국내 기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일본의 약속은 중국 외교 정책 엘리트들이 이미 예상한 움직임이며, 다른 한편으로 한국은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넘어 작전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대만해협에서 군사 상황 발생 시 한·일 양국군의 후방지원 및 정보수집 지원 방안을 논의할 수도 있다. 그러한 논의에서 미국 정부는 대만 해협 분쟁 중에 북한이 군사적 모험에 참여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주한미군의 능력을 한국에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미국 정부는 한국과 NATO 스타일의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대만 분쟁 발생 시 미국의 주의를 산만해지는 상황에 대비하고, 북한에 대한 억제 노력에 대해 더 많은 부담을 분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한국이 북한에 비해 이미 상당한 군사적 이점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큰 도전이라 보기 어렵다.

둘째, 3국은 합동 해안경비 작전을 통해 대만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일본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예를 들어, 2017년에 대만과 일본 관리들은 공동 수색 및 구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마찬가지로 미국은 대만과의 해안경비대 관계 강화를 모색해 왔으며 양국은 2021년에 해안경비대 실무그룹을 설립했다. 2022년 국방수권법은 또한 대만과의 주방위군 협력에 관한 보고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는 해안경비대 훈련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되어야 한다. 이러한 선례를 고려하면 한국 정부도 이에 따라 대만과 해안경비대 합동 훈련을 시작해야 한다. 4개국 모두 함께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특히 대만과 수교하고 있는 태평양 섬 국가 앞바다에서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중국 정부를 자극하는 것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잠재적인 우

려를 고려할 때, 협력은 마약 밀매, 해양 쓰레기, 불법, 미신고, 비규제 어업과 같은 문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셋째, 3국은 '칩4 동맹'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제안된 동맹을 통해 3국은 대만과 함께 국제 무대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는 더욱 강력하고 포괄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4개국 모두 독특한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한국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대만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미국은 장비 기술, 일본은 소재·부품에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칩4는 이니셔티브에 대한 초기 의심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2023년 2월 칩 4는 4개국의 고위 관리들이 참석하는 첫 화상 회의를 열어 지연에 대한 이전의 우려를 해소했다. 2023년 3월, 일본은 이전에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부과된 수출 규제를 해제하여 반도체 분야 협력에 대한 더 많은 장벽을 제거했다. 같은 달 한국은 반도체 전문가 이은호를 대만 특사로 임명했다. 한국 기업의 수출 규제 준수를 지원하는 정부 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의 이 전 원장은 이미 칩4에 대해 호의적인 발언을 한 바 있다. 그의 특사 임명은 한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대만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점점 더 진지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다.

일본과 대만의 참여는 어느 정도 확실하지만, 한국 반도체 수출의 60%가 중국으로 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이 잠재적인 칩 4 동맹을 맺으려 할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남아 있다. 과거 중국의 경제적 압력을 고려하면, 한국 정부는 칩 4 동맹 가입 결정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제적 보복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한다. 첫째, 한국 정부의 의사결정과 관계없이 앞으로 한국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추세다.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 목표를 70%로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격적인 국가 보조금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자급자족을 추구할 때 중국 내 시장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은 이미 전년 동기 대비 13.4% 감소했다. 둘째, 중국은 양안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TSMC 제재를 상당히 꺼리는 모습을 보였다. 더욱이 네덜란드와 일본의 승인을 받은 미국의 수출 통제로 인해 중국 기업들은 중요한 반도체 재료에 대해 SY 하이닉스, 삼성과 같은 한국 기업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다. 따라서 잠재적인 역제재에 대한 우려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본 기사에 나열된 앞서 언급한 방안들은 미국, 한국, 일본이 대만을 두고 3자 방식으로 협력하는 동시에 서로 간의 양자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세 가지 현실적인 안들이다. 이러한 조치 중 일부 또는 전부는 중국 정부에 대만에 대한 군사 행동이 다른 동아시아 안보 주체들에 의해 강력하게 반대된다는 사실을 상기시킬 것이다. 중국 정부가 대만 정부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계속하고 대만을 염두에 두고 점점 더 강력한 군사 능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억지력 구축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PacNet*의 논평과 답변은 해당 작성자의 견해를 나타냅니다. 대안적인 관점을 언제나 환영하고 장려합니다.